

## 돈봉투 수사, 친명 인사 사법리스크에 지역정가 ‘뒤숭숭’

전당대회 돈봉투 이어 ‘친명’ 양부남 법률위원장 영장 신청  
 경선 전 관리당원 모집 시기에 ‘수사리스크’, 정치적 해석도  
 대의원제 폐지 놓고 진영갈등 조짐도... “지역정가 시계 흐릿”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에 이어 ‘고검장 출신’ 친이재명계(친명계) 핵심 인사의 사법리스크로 지역정가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당내 경선에 결정적 키를 쥔 관리당원 모집 시기에 총선 출마 예정자인 친명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돼 일각에서는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30일 광주·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입료를 행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친명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9000여 만원의 수입료를 대가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수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의 광주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양 위원장은 수차례 입장문을 통해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사건을 수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인 선임신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료는 9000만원으로 약정했고 약정한 금액 전액을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고 세무신고도 완료했다. 현금은 단 한 푼도 받은 바 없다”고 사법적 결백을 주장했다.

경선 국민·당원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기로 최근 당내 공천률이 확정됐고, 7월 말까지 경선 투표권을 쥔 관리당원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터진 영장 청구여서 양 위원장 측은 “총선에 악영향을 주고 친명후보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발했다.

양 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지역으로 ‘광주 서구을’을 일찌감치 확정된 뒤 사무실 개설 등을 통해 바다 민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 서구을은 지역구 현역인 양향자 의원의 민주당 탈당으로 무주공산을 노리는 민주당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출신 후보만 4명에 이르며 ‘금빛지들의 전진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내 경쟁자로 김경관 의원(비례), 양 위원장, ‘6선 의원’인 천정배 ‘호남100년살림민

심센터’ 이사장 등 쟁쟁한 후보 3명이 나섰고, 국민의힘에선 하현식 서구를 당협위원장인,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비례)이 출사표를 던졌고, 진보당에선 김해정 풍암호수 원형보전 공동대책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망도 좁혀지고 있다. 검찰은 핵심 인

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대질 신문 등을 통해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직의원 10여 명을 특정할 상태다.

이 가운데 호남 지역구 의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 소환조사 여부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태’에 이은 친명 인사 구속영장으로 기폭이나 어수선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대의원제 폐지’ 등을 놓고 또 다른 진영 갈등이 빚어지는 모양새여서 지역정가 시계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변용일기자



여름철 냉방비 절감 TF 발족회의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23년 여름철 냉방비 절감 TF 발족 회의'에 여권 대선 선풍기가 가동되고 있다.

## 10가구 중 3곳이 1인 가구...전남도 ‘고독사 예방’ 총력

사각지대 발굴·정책연구 등 3개 분야 24개 과제 중점 추진

전남도가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통계청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총 가구수는 77만7358가구에 1인 가구는 27만4108가구(35.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여기에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에 나선다.

‘2023년 전남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역량 강화·정책연구 등 3개 분야 24개 과제를 발굴하고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시행계획은 지난해와 달리 노인, 청년 등

전남도 개별 부서에서 추진 중인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 향상이 기대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분야에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강화’, ‘24시간 위기 가구지원 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강화’, ‘민간 인적안전망 활성화’,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위기가구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재 파악과 공공·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원 연계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서비스 구축

이 기대된다.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분야에선 전남도 개별 부서에서 추진 중인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해 4개 부서가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역량강화·정책연구 분야에선 ‘통합사례관리 직무역량’, ‘전남 고독사 실태·예방방안 연구’, ‘전남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 등 3개 과제를 추진해 업무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관련 연구자료는 고독사 제로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2021년 4월 고독사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남도는 같은 해 5월 ‘전남도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 빠르게 제정했다.

지난해 독자적으로 각 읍·동 고독사 위험군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군으로 발굴한 1969명에 대해 1대1 전담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2차례 실태조사를 추진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시범 공모사업’에 22개 시·군이 참여해 선정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고독사 대응 최선책은 자주 찾아보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킴이단 등을 활용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건강한 밥상의 시작

##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